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제1차 국가자격시험

교 시	문제형별	시 간	시험과목
1교시	B	75분	① 민법(총칙)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자 유의사항 】

1. 시험문제지 표지와 시험문제지 내 문제형별의 동일여부 및 시험문제지의 총면수, 문제번호 일련순서,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시고,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답은 각 문제마다 요구하는 가장 적합하거나 가까운 답 1개만 선택하고, 답안카드 작성 시 시험문제지 형별누락, 마킹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카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답안작성은 시험 “시행일(2018. 5. 26)”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수험자는 QR코드를 통해 가답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문조사 필수)
2. 합격자에게 ‘합격축하 SMS(알림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험지 뒷면 ‘개선사항 및 향후 일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답안 확인

-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민법(총칙)

1. 민법의 법원(法源)인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 ② 어떤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하더라도,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③ 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④ 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이다.
- 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
- ②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
- ③ 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
-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②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 ③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진다.
- ④ 비법인사단 소유의 재산에 대한 대표자의 처분행위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된다.
-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③ 장소, 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어 있는 집합물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⑤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그 토지와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아니다.

5.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②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야 한다.
- ③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 ④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⑤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6. 甲이 乙을 기망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甲의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의 기망사실을 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ㄴ. 甲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ㄷ. 선의의 제3자 丁이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乙이 자신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도 이를 근거로 丁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③ 민법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통상사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 ②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④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다.
- ⑤ 사원총회의 의결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된 사항에 한한다.

9.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피한정후전인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계약이 체결된 경우
- ㄴ. 甲이 수권행위를 통하여 乙과 丁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ㄷ. 乙이 위 토지에 대한 丙의 선행 매매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배임적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甲이 알지 못한 경우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②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 ③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 ④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 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의사표시의 도달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 ③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 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공박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6.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복대리권은 복임행위가 철회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 ②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④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⑤ 법정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에게 대리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17.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ㄴ. 가장매도인이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매도인은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 ㄷ. 허위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18.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추인 및 추인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② 기간을 정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추인 여부의 응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③ 추인의 거절을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 ④ 무권대리행위를 한 후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선의인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 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⑤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하여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 ②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도 추인할 수 없다.
- ③ 해제된 계약은 이미 소멸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 ⑤ 민법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21.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
- ② 연령이 아닌 기간 계산에서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③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 ④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전일로 만료한다.

22. 민법에서 정한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본인의 사망
- ② 대리인의 사망
- ③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 ④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 ⑤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 수권행위의 철회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 ②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④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 ② 부동산의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 ③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채무의 일부변제도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 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25.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행정법

26.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 ① 면제 ② 특허 ③ 확인 ④ 인가 ⑤ 대리

2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③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④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28. 판례에 의할 때 ()에 들어갈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원칙에 위반된다.

- ① 평등 ② 비례 ③ 법률유보 ④ 신뢰보호 ⑤ 적법절차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형성행위로 볼 수는 없다.
 ②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정의 요건이 아니다.
 ④ 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될 수 없다.

30.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 ②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 ③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대부계약”이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⑤ “과징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31.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는 처분성이 없다.
- ⑤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2.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 ㄴ.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
- ㄷ.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ㄹ.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관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3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③ 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④ 행정지도에는 개별법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 ⑤ 사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기공사 도중 도로를 훼손한 전기회사에 도로보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 ②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④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35. 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 ②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③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 ④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36.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나.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ㄷ.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ㄷ. 부상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음에도 구호를 거절하는 사람

- ① $\neg, \perp$ ② $\sqsubset, \sqsupset$ ③ $\neg, \perp, \sqsubset$
④ $\perp, \sqsubset, \sqsupset$ ⑤ $\neg, \perp, \sqsubset, \sqsupset$

41. 합의제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ㄷ.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결정권과 함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다.
- ㄹ.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2.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내부위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②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 ③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위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④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4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ㄱ: 3 ㄴ: 7 ② ㄱ: 3 ㄴ: 10 ③ ㄱ: 7 ㄴ: 7
- ④ ㄱ: 7 ㄴ: 10 ⑤ ㄱ: 7 ㄴ: 15

44.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신청
- ② 무효인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
- ③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
- ④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 ⑤ 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45.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국세환급금결정 ② 세무조사결정
- ③ 건축신고 반려행위 ④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 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

4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neg, \sqsupset$ ④ $\perp, \sqsubset$ ⑤ $\sqsubset, \sqsupset$

47.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체납자는 공매처분취소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 ④ 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체납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 ⑤ 세무서장이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48. 甲은 수형자로서 A교도소 내에서의 난동을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10일 간의 금치처분을 받았다. 甲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난동 당시 담당 교도관의 근무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도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근무보고서의 공개가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취소심판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②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은 A교도소장이 된다.
- ③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교도소장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甲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또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 ⑤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교도소장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없다.

49.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②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당사자주의·변론주의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③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④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내릴 수 있다.
- ⑤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50.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③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④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⑤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51.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조한다.
- ③ 합법적 권위로부터 관료제의 정당성을 찾는다.
- ④ 개인성(personality)을 고려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 ⑤ 규칙과 절차의 강조로 형식주의(red tape)와 같은 역기능이 초래된다.

52. 리더십 행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시각에서 리더의 행동을 파악한다.
- ② 업무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 ③ 리더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 ④ 리더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⑤ 훈련에 의해 효과적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3.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잡성은 조직을 구성하는 기구의 분화정도를 의미한다.
- ② 수평적 복잡성은 조직 내 수직적 계층의 수를 의미한다.
- ③ 업무수행의 규칙과 절차가 표준화될수록 조직구조의 공식성은 높아진다.
- ④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 ⑤ 의사결정의 권한이 상위층에 집중된 경우 집권화된 조직이라고 한다.

54. 엽관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파성이나 정치적 요인을 기준으로 공직임용이 이루어진다.
- ② 개인의 능력, 자격, 업적 등 실적 외의 요인에 의해 공직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실주의와 유사하다.
- ③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 ④ 공직의 대규모 경질을 통해 공직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⑤ 우리나라는 엽관주의적 성격의 공직임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55. 동기부여 과정이론은?

- ①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②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 5단계론
- ③ 허즈버그(F. Herzberg)의 2요인 이론 ④ 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
- ⑤ 맥클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56.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강임은 징계처분에 의한 수직적 인사이동이다.
- ②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③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 ④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 내·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 적격자를 선발·임용하는 제도이다.
- ⑤ 공모 직위는 특정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적격자를 선발·임용하는 제도이다.

57. 주인 - 대리인 이론(principal - agen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의 대칭성을 가정한다.
- ㄴ.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에 근거한 이론이다.
- ㄷ.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 ㄹ. 주인과 대리인의 상충적 이해관계로 대리손실(agency loss)이 발생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8.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는 무관하다.
- ②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③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공급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 ④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을 강조한다.
- ⑤ 자연독점산업의 경우 경쟁의 촉진이 산업 전체의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59.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효율성은 효과성의 필요충분조건이다.
- ② 형평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한다.
- ③ 월슨(W. Wilson)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정책결정권한 및 적극성을 강조한다.
- ④ 롤스(J. 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으로 최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차별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 ⑤ 현대 행정에서 적극적(실질적) 의미의 민주성은 의회의 결정에 대한 철저한 순응과 법치 행정을 강조한다.

60. 행정(학)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의 정치적 특성을 나타낸다.
- ② POSDCORB는 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 ③ 행정학은 실증학문일 뿐만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규범학문의 성격도 지닌다.
- ④ 행정 관료의 정책형성에 대한 영향력 증가는 대의민주제의 정치적 책무성(political accountability)을 강화한다.
- ⑤ 행정학은 학제간(interdisciplinary) 성격을 갖는다.

61. 성과평가(성과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목표는 성과목표의 상위목표로 기능한다.
- ② 효과성은 산출(output)보다는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둔다.
- ③ 성과평가 논리모형에서 영향(impact)은 프로그램이 의도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 ④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산출의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족도와 같은 성과지표를 활용한다.
- ⑤ 미션과 비전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검증보다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평가차원에서 다루어진다.

6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공동사무를 협력·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 ① 광역도시계획 수립
- ② 행정협의회 구성
-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 ④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설립
- ⑤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63. 행정개혁(행정혁신)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은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시민의 집단적 역량과 참여를 강조한다.
- ② 뉴거버넌스 참여주체인 시민사회는 상호의존적 종속관계에 기초한 자율적 교환을 특징으로 한다.
-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으로서의 주민보다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주민을 강조한다.
- ④ 신공공관리론은 현대사회의 난제(wicked problems) 해결을 위해 행정부서들 또는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다.
- ⑤ 뉴거버넌스 이론은 정부실패가 아닌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처방으로 간주된다.

64.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옴브즈만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 ② 권고, 의견 표명, 감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 ③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65. 행정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에 관한 이론의 맥락성과 상대성을 강조한다.
- ②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현상의 전체정보보다는 구성부분 사이의 일방적·선형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고 본다.
- ④ 전통적인 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은 제도가 일단 형성되면 일정한 경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을 강조한다.
- 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일방적 결정요인으로 간주한다.

66. 다음 가정을 기본전제로 하는 이론은?

- 한 국가는 수많은 지방정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 각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출과 조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개인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역 간 이주가 가능하다.

- ①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 ② 딜론의 원칙(Dillon's rule)
- ③ 보충성의 원칙(subsidiary principle) ④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
- ⑤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67. 실체설의 관점에서 본 공익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 ② 개인의 사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선을 최대한 증대시킨다.
- ③ 공익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및 조정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 ④ 공익은 민주적 정치체제 내의 개인과 집단 간 정치활동의 결과물이다.
- ⑤ 여러 사회집단의 대립과 협상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수 이익에 일치되는 것이 공익으로 도출된다.

68.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부분의 지방교부세는 '끈이 달린 돈(money with strings)'의 성격을 띤다.
- ② 많은 경우에 있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다.
- ③ 조정교부금은 일단 교부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처럼 활용된다.
- ④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 ⑤ 2018년 현재 지방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는 분권교부세가 있다.

69. 전자정부의 주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민이나 민간조직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폭 넓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②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하는 열린 정부이다.
- ③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 접근을 제고한다.
- ④ 행정업무 절차의 전산화가 항상 행정의 생산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 ⑤ 시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70. 정책네트워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의존성을 토대로 한 행위자들 간의 교환관계를 중시한다.
- ②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에 비해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 ③ 단순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하위정부의 경계와는 달리 이슈네트워크의 경계는 모호하다.
- ④ 하위정부 모형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영역에서 정책결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⑤ 이슈네트워크에서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배분이 불평등하다.

71.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재화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니고 있다.
- ② 유료재(toll goods)는 고속도로나 공원 같이 배제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재를 포함한다.
- ③ 순수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그 비용은 수익자가 자신의 편익에 정비례하여 직접 부담한다.
- ④ 순수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⑤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72.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②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 ③ 로위(T. Lowi)가 주장하는 배분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계급 대립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 ④ 로위(T. Lowi)의 재분배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의 갈등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 ⑤ 알몬드와 파우얼(G. Almond & B. Powell)은 정책을 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73.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칙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속비 ㄴ. 세입세출예산 ㄷ. 명시이월비 ㄹ. 국고채무부담행위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perp, \sqsubset, \sqsupset$ ⑤ $\neg, \perp, \sqsubset, \sqsupset$

74. 정책평가 연구설계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내적 타당성은 정책변수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 ② 외적 타당성은 정책 수단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 ③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가 이론적 구성개념과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④ 성숙요인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
- ⑤ 준실험이 진실험보다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더 높다.

75.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예산은 재원 조달 및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총계와 예산순계로 구분된다.
- ③ 기능별 분류방식은 세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의 분류에 적합하다.
- ④ 예산은 회계 간 중복 거래 금액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된다.
- ⑤ 사업별 분류방식이 조직별 분류방식보다 독립된 행정부서의 예산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하다.

[전문자격시험 개선사항 및 향후 일정 안내문]

□ 개선사항 안내

행정사 자격시험 수험자의 응시편의를 위해 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험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 시험전일 18시부터 시험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시험실 사전 안내 메시지(알림톡) 발송 (알림서비스에 수신 동의한 수험자 대상)
- ▶ Smart Q-finder(시험실 바로가기) 수험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확인 또는 큐넷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에서 확인

2.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시험 합격축하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영어(토익, 지텔프) 성적 다이렉트 등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기존 대행사를 통한 유료 온라인 제출과 달리 큐넷 - 토익 성적전산시스템 상호 연동으로 큐넷에서 바로 등록 및 자동 승인됩니다.

4. 객관식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가답안을 조기 공개합니다. ▶ 시험당일 14:00

☎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우리공단은 「고객매우만족 10점 만점에 10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향후 일정

- 의견제시 및 가답안 공개 : `18. 5. 26(토) 14:00 ~ 6. 1(금) 18:00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18. 6. 27(수) 09:00
 - Q-Net 행정사 홈페이지(60일간) 및 ARS 1666-0100(4일간)
- 제2차 시험 원서접수 : `18. 7. 30(월) 09:00 ~ 8. 8(수) 18:00
- 제2차 시험 시험일자 : `18. 9. 15(토)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18. 11. 21(수)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